

與 지도부 “재난지원금 1차 때와 상황 달라”

이재명 지사, 선별 지원 수용 의사…지원 방식 논란 진화
업종별 피해 정리돼 맞춤 지원 가능…사각지대 추가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의 방침인 선별 지원 수용 의사 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거센 비판과 함께 선별 지원의 부작용을 언급하고,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 내 인사들이 있는 만큼 여진이 이어질 개연성은 다분하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당위성을 알리며 논란의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지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 지사가 선별 지원의 후폭풍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처음 가 보는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아니면 남따러지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 때와 지금은 상황

이 다르다며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1차 지원 당시 여당은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업종별 피해가 부처별로 정돈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갑석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에서 “이 지사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 좀 과하게 나온 지점들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불협화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별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

면 선별 지원 찬반은 7대3, 보편 지원은 5대5로 나오는 등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선별 지원을 갈등과 분열로 보는 이 지사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선별 지원이 결정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선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 등으로 사각지대와 소비 진작을 쌍끌이로 챙기겠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전국민 지급, 재정상 어려워 선별 불가피”

수석·보좌관회의 주제
“한계계층 살리는 게 절박”
추경 처리 야당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의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론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실태를 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한 추척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 및 맞춤형 지원방식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의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할 테니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 확산세도 많이 줄었다”며 “중대 고비에서 정부의 신속한 강력 조치가 효과를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추척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與 “조수진 재산신고 누락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조수진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액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허위 재산신고는 해프닝이 아니다”며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정국교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의원을 향해 “시일이 촉박해서 실수했다고 하지만, 전 직장에서 사표를 낸 3월 5일부터 재산등록 마감일인 같은 달 26일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 의원이 누락한 재산 11억원 가운데 5억원이 사인 간 채권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조수진 의원은 5억원을 빌리고 싶다. 빌려주고 잘 잊으시는 것 같다”고 비꼬는 글도 올렸다. /연합뉴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을 듯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동 자제 메시지

올해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성할 경우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추석 교통 대책과 관련 “국민들이 성심껏할텐데 일단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꼭 이동해야 할 분은 (이동)하셔야 하는데 가능한 이동을 줄여주실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시행해왔다.

설날 및 추석 당일·전날·다음날까지 3일간과 그밖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기간에는 고속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하는 차량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에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18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석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원래대로 받을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최대한 지역 간 이동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개천절 집회 선긋기

원희룡 “당이 막아야”…김병민 비대위원 “이유불문 허용 안돼”

일부 보수단체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도 개천절인 내달 3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 등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선긋기는 김종민 의원의 지지율 상승세를 꺾고 중도층 이탈과 보수세력에 대한 염증을 다시 불러일으킨 광화문집회 사태의 재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7일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격정이 커질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집회는 이념과 목적을 떠나서라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얼마든지 의사 표현이나 정부 비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보수의 제1 가치”라며 “보수를 잠정하며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일체의 시도는 당과 지지자들이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고, 일부 당원들은 집회에 참석했다고 지적하며 “이번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제원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당을 믿고 집회 참석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코로나19가 종결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역 실패에 대해 변명하고 면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에 3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7일 민주연구원의 새 원장으로 3선인 홍익표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연구원 원장직은 양정철 전 원장이 지난 4월 총선 직후 사퇴한 뒤 공석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와 내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곧 이사회를 열어 홍 의원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상임고문으로 이해찬·오종일·추미애 전 대표와 김원기·문희상·임

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과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을 위촉했다.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진표·변재일·설훈·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두관·전혜숙의원을 임명했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원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책,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9. 8(화)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나 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
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신아정(이하 “갑”)과 주식회사 태원전력공사
(이하 “을”)는 2020년 09월 4일 개최된 각 회사의 임시주
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무부문을 분할하고 분할된
부문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고 “갑”
의 분할된 전기공사업의 권리와무를 “을”이 승계하며 합병
제530조의 9 제3항의 결의 절차를 밟아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
하였는바, 위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일 익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지
기 바람.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회사의 주주들은 해당 회사
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람에 이에 공고함.

2020년 09월 08일

“갑” 주식회사 신아정
경기도 안성시 동안구 영예로 122, 1022호
(호주제 호계제사명플랜스)
대표이사 이경우

“을” 주식회사 태원전력공사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 43-1
대표이사 장중우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대국전력(이하 “갑”)과 한다와 주식회사 국
제전(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0년 09월 07일 개최
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 재산의 일부를 전기
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
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합병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
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
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
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
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람.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의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
라와 이에 공고함.

2020년 09월 08일

“갑”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1로 58-8
회 사 명 주식회사 대국전력
대표이사 박봉균

“을”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23(돈덕동)
회 사 명 주식회사 국제전기
사내이사 김효식

정 정 공 고

본지 2020년 9월 4일자 게재된 (주)서
전이앤씨와 (주)경광의 분할합병공고
중, 갑의 주 소 “전라북도 장성군 진원
면 노사로 478”를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노사로 478”로 정정 공고함.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
제1339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